民間主導型經濟下에서의 政府의 役割
—精神文化研究院講演—

具 滋 曄
<韓國發明特許協會 會長·럭키그룹會長>

다음은 6月 28日 具滋曄會長이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經濟界人士와 政府官吏들에게 행한「民間主導型經濟下에서의 政府의 役割」이란 主題의 講演全文이다. <編 輯 者 註>

요즘처럼 經濟與件이 어려울 때 일수록 政府와 國民間에 充分한 意見交換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슨 일이나 그렇겠지만 經濟도 衆智를 모아야지 서로 어려움도 덜고 活性化를期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의 運用方式이 어떻게 돼야 좋겠느냐 하는 問題만 해도 그럴 것이다. 몇 사람의 專門家가 理論整然하고 딱 부러지게 方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술술 풀릴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經濟를 함께 걱정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眞實되게 만나서 더 좋은 方向을 자꾸 찾아봐야 뭔가 實質的인 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經濟運用方式의 問題는 한마디로 해서 앞으로 우리 經濟를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政府가 맡아야 할 領域과 役割은 무엇이고, 民間經濟部門이 맡아서 해야 할 役割과 機能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라고 본다.

最近 數年 사이에 이 問題가 크게 擡頭된 것은 아무래도 過去 60年代부터 深化되어 온 所謂 政府主導型 指示經濟體制에 對해서 政府나 企業이나 다 어떤 限界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經濟는 지난 1962年의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始作되면서 부터 50年代에 追求되었던 自由企業的 市場經濟體制에서 計劃的 指示經濟體制로 急速하게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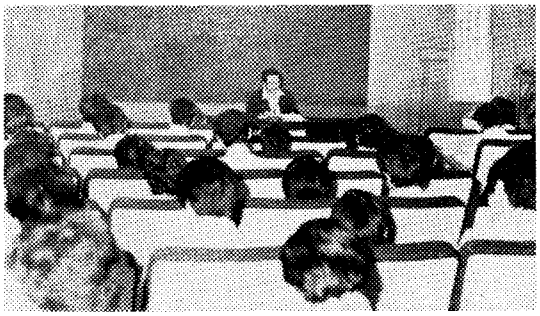
60年代初에 우리의 經濟運用體制가 그렇게 바뀌게 된데는 그 나름대로 必要性이 있었다고 본다.

우리 나라는 그 當時만 하더라도 經濟의 規模가 작은데다가 資本이나 技術 같은 可用資源의 規模도 역시 크게 限定되어 있었고 民間의 經營能力도 充分히 開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政府가 計劃的이고 個別的으로 指導하고 干與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能率的이었다.

그같은 背景 아래서 이루어진 60年代 以後의 計劃的이고 指示的인 經濟開發은 우리나라의 經濟的地位를 크게 높였으며 先進國들조차 경계하는 新生工業國의 隊列에낄 수 있게 되었다.

62年度에 겨우 5千5百萬달러에 지나지 않던 輸出額이 昨年에는 2百億달러를 突破함으로써 年平均 38%라는 엄청난 伸張率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그렇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몇가지 政策手段에 너무 依存하여 外形的인 目標達成을 重視하는 經濟運用에 기울어진 탓으로 여러가지 副作用을 낳은 것도 事實이다.



구태여 例를 들어 본다면 輸出이나 物價 그리고 投資財源의 配分 같은 것을 定해 놓은 目標에 도달되도록 與件을 造成하면서 間接的인 誘導手段을 사용하는 것은 必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個別企業에 對해서 目標를 割當해 놓고 이를 達成토록 하기 爲해서 너무나 强한 行政力을 動員한 것은 投資의 浪費를 招來하기도 했고 企業의 自律的인 經營合理化를 妨害하기도 했다.

그리고 計劃的인 指示經濟가 이룬 成果로 輸出이 엄청나게 增大되고 全般的으로 經濟의 規模가 커졌지마는 反面에 外貨稼得率, 對外競爭力, 또는 技術의 蓄積, 內需產業과의 均衡등에서 問題가 많이 생겼다.

그 結果는 바로 오늘날 우리 國民經濟가 안고 있는 主要한 懸案課題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過去의 官主導型指示經濟體制가 설혹 特別한 試行錯誤나 副作用을 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最近의 經濟環境과 將來의 經濟를 展望해 볼 때 工業化가 극히 初步的인 段階에서 奏效했던 政府의 役割領域도 상당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本人이 생각하는 바로는 80年代는 低速成長의 時代요 技術主導의 時代이며 國際化의 時代라고 본다.

이 3가지의 主流를 통털어서 볼 적에 國內의 모든 企業들이 量的 擴大가 아닌 質的 成長을 追求함으로써 對外競爭力을 確保하는 것이 國民經濟의 安定的 發展을 이룩하는데 決定的인 要諦가 되지 않을 수 없다.

低速成長時代를 잘 넘기기 爲해서는 政府는 政府대로 量的 擴大主義와 目標達成에 얽매인 經濟運用에서 과감히 脫皮해야 할 것이며 企業 역시 外形 爲主의 發想에서 벗어나 收益性을 重視하는 經營으로 轉換해야 할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政府나 企業이나 附加價値를 높이고 各 部門의 合理化를 期하는데 最善을 다해야 함은 勿論이다.

그리고 事業의 選擇이나 프로젝트別 投資計劃 및 優先順位의 設定 그리고 外資導入과 같이 開發初期에 政府가 專擔하다시피 했던 機能도 相當部分은 企業이 自律的으로 決定함으로써 각박한 經濟環境에 기민하게 對處할 수 있도록 政府가 誘導해 주어야 하리라고 본다.

本人이 關係하고 있는 外國人 合作投資會社의 美國人 任員 한 사람은 언젠가 本人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政府로부터 事業承認을 받는데 있어서 關聯部處가 너무 많고 거기다가 關聯部處間에 業務協議過程이 너무 복잡하여 事業計劃에서부터 政府許可까지 지나치게 時間이 많이 걸리는데다가 最終意思決定 機關조차 分明치 않아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이 같은 不滿은 政府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셔야 할 理由있는 不滿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 企業 스스로 國際化를 追求하면서 世界市場에서 치열한 競爭을 치루어야 하는 時代에 있어서 市場情報나 收益 및 輸出展望 그리고 技術選擇등은 當該企業들의 判斷이 오히려 신속하고 效果的일 때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의 國際經濟環境은 그 變化가 너무나 빠르고 多元的이기 때문에 政府가 全體

的으로 狀況을 把握해서 計劃을 세우고 이를 實踐에 옮기는 政策運用方式만으로 適應하는 데는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장삿꾼들은 自己利益을 追求하기 때문에 利益이 있는 곳에는 누구보다도 생각이빠르게 돌아가고 事態에 유연하게 對處할 수 있지만 經濟計劃의 樹立者나 政策의執行者는 자칫하면 너무 硬直된 思考에 따져서 經濟의 흐름에 기민하게 對處하지 못하는 弱點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30餘年間 우리가 經驗한 바로는 政策當局이 現實經濟의 動向을 제때에 正確하게 把握하지 못해서 政策選擇의 失敗를 기록한 事例도 적지 않았다.

예컨데 景氣가 이미 沈滯에서 벗어나 上昇局面으로 접어들었을 때 政策當局은 總需要擴大政策으로 對處하여 오히려 景氣過熱을 促進시키고, 反對로 景氣가 下降局面으로 들어섰음에도 不拘하고 계속해서 緊縮政策으로 一貫함으로써 不況을 더욱 深化시키는 事例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點을 감안해 볼 때 過去와 같이 政府의 몇가지 政策手段에 主로 依存하는 經濟運用方式은 분명히 새로운 轉換點을 찾아야 되리라고 본다.

물론 새로운 經濟運用方式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다, 하더라도 그것이 從來에는 우리 經濟의 運用을 政府가 主導하고 民間이 追從하여 왔으나 이제는 民間이 經濟를 全的으로 主導하고 政府가 이에 追從해야 한다는 式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決코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經濟體制의 問題라고 하더라고 그 속에는 몇가지로 分類해서 볼 點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本人이 생각하는 바로는 經濟體制에 關한 論議의 主眼點은 첫째로 누가 經濟運用의 主役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과 둘째로 經濟發展計劃은 누가 主導해나가야 하느냐 하는 점, 그리고 세째로 經濟體制上에 어떤 機能이 强化되어야 하느냐 하는 點, 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적에 本人의 基本的인 생각은 첫째로 經濟運用에 있어서는 政府와 企業이 有機的인 協助體制를 더욱 强化·發展시켜나간다는 大前提아래서 運用의 效率을 높이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일이지, 民間部門이 政府를 대신해서 經濟運用을 主導하는 主役이 되어야한다는 式으로 끌고가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믿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經濟運用에 있어서 民間主導라는 것은 國民經濟發展에 對한 政府와 民間의 役割을 徹底하게 相互補完的인 關係로 놓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經濟運用에 대한 政府와 企業의 協助體制가 보다 生產的이고 보다 能率을 높이며 副作用과 試行錯誤를 可能한 限 줄이기 爲해서는 政府나 企業이 相對쪽을 一方的으로 說得시켜 끌고갈려고 하는 姿勢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例컨데 經濟政策을 세우는데 必要한 合議를 구하기 爲해서 마련하는 諮問機構나 懇談會 같은 것이 미리 定해놓은 結論으로 誘導하는 形式的인 諮問機構나 懇談會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야말로 처음부터 허심탄회하게 問題를 露出시켜 함께 생각하고 풀어나간다는 姿勢와 雰圍氣 속에서 名實相符한 協議體로서 運營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政策의 結果로 나타날 수 있는 試行錯誤를 最小化시키는 한 가치 方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날 많은 副作用과 試行錯誤를 낳았던 經濟體制의 運用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政府가

經濟를 主導했다는 事實보다도 政府와 民間의 相互補完的인 協助機能과 各界各層의 廣範圍한 參與가 輕視되었다는 點에 問題의 소지가 더 크게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둘째, 經濟發展計劃은 우리나라의 産業發展段階로 보아서 역시 政府가 계속해서 主導해나가야 할 重要한 政府의 役割領域이지, 이것조차 企業이 스스로 樹立하고 推進해나갈 領域은 아니라고 본다.

政府는 國家의 基本目標와 合致하는 綜合的인 經濟社會發展計劃을 세워 民間部門이 이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며, 企業은 政府가 樹立하는 計劃을 市場 속에서 具現하는 實現主體라는 位置를 스스로 다져나감으로써 政府와 企業의 役割領域의 相互補完關係를 確立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經濟計劃이라는 것도 民間의 推進主體와 동떨어져서 樹立되고 執行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政府는 民間의 個別的인 要求를 最大限으로 듣고 이를 全體的으로 調和·集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돌이 켜보면 過去에는 政府가 民間의 意見이나 建議를 그저 엄살 정도로만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 결과로 民間이 建議한 事項을 解決할 必要性이 政府에게도 認識되었을 때는 이미 處方의 時期가 늦어 政策의 實效를 期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政府가 經濟計劃이나 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特히 神經을 써주기를 바라는 점은 民間의 創意性을 制約하지 않는 範圍 안에서 支援機能과 調整機能을 發揮해달라는 겁니다.

세째, 經濟構造的인 側面에서는 어디까지나 市場메카니즘을 基礎로 하여 價格 및 競爭의 自律化가 最大限으로 促進되어야 할 것이다.

民間主導라는 말이 가장 잘 適用되는 部分도 바로 이 部分이 아닐까 한다. 市場經濟의 自由競爭原理에 立脚한 經濟運用을 暢達함으로써 民間의 創意와 能率을 提高시키고 特히 企業의 役割과 責務를 主軸으로 하여 經濟를 發展시켜야한다는 것이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라는 말이 含蓄하고 있는 촛점이라고 할 수 있다.

制限된 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해야 한다는 側面에서 볼 때 完全한 自由競爭의 原理를 認定하는 것은 投資의 浪費를 招來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읍니다만, 長期的으로 봤을 때 完全한 自由競爭의 風土를 定着시키는 것이 역시 보다 能率的일 것이라고 本人은 믿는다.

80年代와 90年代에 韓國經濟가 追求하는 高度技術을 베이스로 한 産業發展은 技術開發의 核心主體인 民間企業部門의 充分한 創意力이 動員되지 않고는 不可能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니만치 이와 같은 技術革新上의 理由때문에도 市場機能의 活性化는 더욱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政府와 民間部門의 調和속에서 經濟運用이 이루어지고 市場機能이 活性化되기 위해서는 民間의 自制와 呼應, 그리고 政府의 政策과 合致하는 가운데 企業活動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꾸준한 努力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른바 民間主導를 표방하면서도 그 裏面에 여전히 政府에 기대어에 自己企業의 生存을 保障받으려는 安逸한 惰性을 버리지 못한다면 政府의 行政指導와 直接干與가 不可避할 것이다.

最近 産業構造 改編의 一環으로 政府가 主導한 企機統廢合이 一部業種에서 상당한 陳痛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는 어떤 業種에서는 民間企業들 스스로 政府의 統廢合 措置를 要望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는 아직도 60年代, 70年代式의 經濟運用體質이 溫存하고

있는 하나의 事例라고 하겠다.

産業構造의 高度化라는 것이 우리 經濟의 커다란 課題이기는 하지만 政府가 物理的인 힘으로 産業構造를 調整하는데 치우쳐 個別企業의 自律的 意思를 꺾으려고 할 때는 상당한 마찰과 副作用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다.

企業이라는 것이 해 보면, 競爭이 말 못하게 심하고 그런 가운데 系列化의 餘地가 있다.

技術改發力이 떨어지고 資本力에 劣勢인 企業은 치열한 競爭에서 敗北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企業은 보다 實力있는 企業이 흡수하여 正常的으로 發展시키는 것이 自由企業主義의 한 原理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에 政府가 일일히 干涉하다 보면, 政府로서의 責任이라는 側面에서, 이미 不實해진 企業조차도 끊임없이 救濟金融을 實施하여 끝내 當該企業은 물론이고 銀行까지 不實化시키는 事例가 發生하는 것입니다. 施設投資를 많이 했다는 理由때문에 이미 不實해진 企業을 살리려고 오히려 잘 되는 企業을 犧牲시키는 일 같은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政府主導型의 金融運用은 開發初期에 있어서는 資本動員効率을 높여서 經濟成長에 寄與한 바가 컸읍니다만, 官治의 度가 지나치게 되면 金融産業 自體의 脆弱化를 招來하여 적지 않은 副作用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體驗的으로 알고 있다.

政府는 民間企業이 맡고 있는 市場指向的인 生産에 關해서는 投資業種의 選定이나 外資導入의 規模決定, 銀行融資의 條件과 規模決定, 製品價格의 設定, 輸出의 比率等에 대한 거의 大部分의 干與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物量的 目標를 定해 놓고 分別없이 行政力을 動員해서 그것을 억지로 達成하려고 했던 過去의 經濟運用方式이 낳은 잘못을 앞으로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되겠다.

最近에 政府가 컴퓨터産業에 參與할 專門業體를 指定하기 위해서 希望業體의 參加申請을 받아 놓고 있는데, 本人의 私見으로는 이 경우의 業體指定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政府의 意圖는 물론 컴퓨터産業 參與業體의 亂立으로 因한 投資의 浪費를 事前에 防止하려는데 있을 것이지만 原則的으로 同種産業에 參與하고 싶어하는 企業은 모두 自律的으로 分野를 定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長期的으로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컴퓨터産業이라고 하지만 워낙 分野가 넓고 發展可能性이 큰 만큼 많이 參與하더라도 各各 特性을 살린 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 企業의 投資意慾은 他律에 의해서 提高되는 것이 아니고 自體的인 事業判斷에 依해서 일어나는 屬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만치 最近의 컴퓨터産業에 대한 民間企業의 活發한 投資意慾을 政府가 過度하게 干涉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꺾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政府가 어떤 事業을 할 수 있는 企業을 일일이 指定해 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利權化하게 된다. 어떤 事業이 利權化하게 되면 企業들의 自由競爭을 通한 自體 體質의 强化나 自由競爭에서 이기기 위한 經營合理化가 誘導되기 보다는 오히려 政府에 對한 依存心理만 助長하게 되지 않을까 憂慮된다.

그러나 此際에 政府나 民間이 모두 경계해야 되겠다싶은 点은, 지난 20年間에 너무 성급하게 適用된 目標達成爲主의 官主導型 經濟運用方式이 많은 部門에서 試行錯誤를 빚었듯이 지금에 있어서도 充分한 與件을 造成해가지 않고 단순히 過去에 對한 反件用으로 經濟體制를 단숨에 바꾸려 한다면 또 다른 混亂과 矛盾이 야기될 수 있다는 点이다.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本人의 느낌으로는 너무 조급하게 어떤 決定을 내리고 너무 쉽게 問題를 풀어 갈려고 하는 意識이 過去 우리 經濟社會의 꾸준하고도 安定的인 發展을 沮害한

커다란 要因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날 經濟運用方式의 轉換이라는 問題도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해치우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本人의 所信이다.

過去 빠른 經濟成長過程에서 빚어진 市場機能의 歪曲現像을 고쳐 나가는 일은 하루 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形成되어온 旣存의 바람직하지 못한 經濟秩序와 社會的 通念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일에서 부터 착실하것 變化를 追求해야 할 것이다.

우선 企業을 中心으로 한 民間部門은 自律意志와 責任意識을 調和시키고 機會均等과 페어 플레이 精神을 定着시키며 企業自體의 利益追求에 立脚한 競爭意識과 國際社會속의 韓國企業이라는 同伴者意識을 잘 調和시키는 等으로 總體的인 經濟倫理의 再定立을 實現해야 하겠다.

企業活動의 結果에 對해서는 스스로 철저하것 責任을 지겠다. 그리고 國際競爭時代에 살아남기 爲해서 부지런히 새 商品, 새 技術, 새 市場을 開拓해서 國民經濟 活性化의 主役이 되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를 새삼스럽게 다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餘年間 企業이 擴張되면서 企業 안에서도 보면 管理者들이 責任을 자꾸 위로 돌리고 자신들은 無事安逸에 빠져두는 傾向이 있읍니다만, 主人意識이 欠如된 이같은 風潮는 企業 안에서 철저하게 사라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官僚體制 안에서도 그러한 点이 있지나 않은가 한 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政府는 經濟의 精神的·心理的 側面의 活性化를 爲해서 常識과 合理, 順理와 正道가 通하고 勤勉·誠實·直摯한 努力이 成功하는 社會風土의 造成을 先導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企業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自己辯護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읍니다만, 企業人이 正當하게 評價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資本主義의 動力이 무엇인가. 그것은 企業과 革新이 아니겠는가 第2의 經濟跳躍을 國民的인 意志로 實踐해야 될 時期에 있어서 企業家精神처럼 重要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平素 本人의 생각이다. 政府는 民間經濟 主體들에 對하여 次元높은 啓蒙과 指導, 그리고 中和的인 誘導役割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政府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지만 지금 우리 經濟의 現況을 비추어 볼 때 優先的으로 政府가 할 일은 그동안 크게 萎縮된 長期的인 成長潛在力을 기르기 위한 여러가지 政策을 推進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그 속에는 우리 나라의 未來產業이 要求하는 人力의 育成 그리고 總體的인 敎育投資의 增大를 通한 科學技術의 劃期的인 發展과 全般的인 知識水準의 提高等이 包含될 것이다.

將來에 우리의 產業이 國際社會 속에서 充分한 競爭力을 갖기 爲해서는 바로 지금의 技術力向上과 比較優位產業의 集中育成이 重要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10年 또는 20年後에 우리의 產業을 끌고 갈 豫備人力을 充分히 養成해 놓는 일이 時急하다. 만약 20年後의 우리 社會가 대단히쓸모 없는 人力밖에는 確保하지 못했다고 할 때 그 責任은 바로 지금 이 社會의 中樞로서 활약하고 있는 現役들에게 있다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技術開發政策은 상당히 意慾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그 內容에 있어서 民間의 技術開發에 대한 意慾提高라는 側面에서는 몇가지 問題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一例로 民間技術硏究所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간신히 自體開發에 成功한 技術에 對해서는 政府가 그 技術을 保護해 주고 企業化를 支援해야 할 것인데도 不拘하고 이른바 輸入自由化다 資本自由化다 하는 命題에 얽매여서 自體開發技術에 대한 保護機能이 상당히 未洽하다

數年間에 걸쳐서 나름대로 相當한 硏究開發費를 投入하여, 先進國企業이 移轉해주기를 희

피하는 技術을 自體開發해 놓고 나면 先進國企業의 立場에서 그 技術의 獨占價値가 줄어듬에 따라 韓國內에서 技術을 自體開發한 會社와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에 그 技術을 팔려고 든다. 그럴때 政府는 特定企業의 一方的인 保護라는 次元에서가 아니라 韓國의 全體企業의 自體的인 技術開發을 促進하고 技術開發投資의 效率을 提高시킨다는 大局的인 次元에서 自體技術發展에 대한 强力한 保護策을 講究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技術提携를 하게 해주더라도 相當한 水準까지 自體技術을 開發해 놓은 企業에 優先的으로 許可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次元높은 外國技術에 對해서 消化도 빠르고 先進技術과 自體技術을 잘 調和시켜서 自體開發品의 性能을 더욱높일 수 있는 것이 分明하다. 우리 企業이 數億원을 들여서 어렵게 開發한 技術과 그 技術로 만든 製品을 우리 政府와 消費者가 保護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自體技術開發에 對한 意慾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企業하는 사람의 慾心으로만 듣지말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돈도 많이 들이고 精誠도 많이 들여서 自體開發한 新製品에 對해서는 제 값을 받아 利益도 좀 넉넉하게 남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自己犧牲을 無限定 감수하면서까지 技術開發에 全心全力할 企業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特히, 電子產業 같은 分野는 技術進步의 速度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尖端技術의 導入도 重要하지만 先進國의 技術武器化 傾向 等에 따라 國內企業의 自力에 依한 技術開發能力의 培養은 더 더욱 重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問題에 있어서는 政府의 所望스러운 制度的 裝置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 企業의 技術開發 意慾을 꺾어 놓는 것이 現實이다. 現在 거의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技術開發促進法의 "國產 新技術製品의" 製造者에 對한 保護規程"이 擴大 施行되는 것이 時急한 實情인 것이다.

물론 이 자리는 昨今의 政府施策에 對하여 是是非非를 가리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려움에 直面해 있는 우리 經濟를 풀어 나가는 데는 모든 經濟主體들 간에 批判과 叱咤만이 앞서서는 決코 안 될 것이다.

잘 안되는 집안에는 원래 싸움이 많은 法입니다만, 어떤 社會나 自己反省보다 남의 잘못을 꼬집는 일이 앞서는 社會風土 속에서는 바람직한 發展과 改善은 이룩하기 어렵다.

마주 앉는 姿勢는 어디까지나 맺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 손을 모을 수 있는 姿勢가 되어야 할것이다.

一方的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따로 區別되는 그런 雰圍氣부터 우리 周邊에서 拂拭하는 것이 어쩌면 過去의 硬直된 經濟運用方式이 남긴 副作用을 改善하는 한 가지 方途가 아닐까 싶다.

經濟政策을 立案하고 推進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우리 業界를 비롯한 國民의 注文과 主張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 주셨으면 한다.

우리 經濟의 運用體制에 關한 代案은 政府와 民間의 役割에 對한 形式的인 區劃을 任意로 해 놓는다고 해서 完結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어디까지나 調和의 經濟를 追求하는 官民의 努力이 蓄積되어 政府部門과 民間部門 間에 計劃機能과 市場機能 間에 훌륭한 調和가 形成될 때 비로소 過去開發時代의 지나친 官主導型 經濟運用이 낳은 弊害를 克服하고, 國民經濟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